

노사정 대표자 회의 개최

- 노사정 대표 4인, 미래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 위해
속도감 있는 사회적 대화를 해나가기로 -



▲ 10월 4일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왼쪽부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10월 4일, 권기섭 위원장 취임 이후 첫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 '23.12.14. 노사정 대표자 회의 이후 10개월 만에 개최되었음

회의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이 참석하여 사회적 대화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 노사정 대표 4인이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이번 회의는 '24.2.6.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의 진정성 있는 논의 및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현재 운영 중인 경사노위 회의체별 논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사회적 대화 운영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사회적 대화에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회의체 등을 구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 청년위원회를 우선 발족하고, 필요시 여성·소상공인 등 계층별 위원회도 구성 예정

아울러, 근로시간 개편,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쟁점에 대해서는 현장 간담회, 토론회 등 공론화를 통해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밖

에도 경사노위 각급 위원회 성별 균형 확보에 관한 운영세칙 개정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대화 참여 비율을 높여나가기로 하였다.

생산적이고 속도감 있는 사회적 대화를 위해 향후 노사정 대표자들은 정례화된 만남을 갖고 시급한 노동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권기섭 위원장 회의 결과 기자 브리핑

한편 권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나눴다.

권 위원장은 “미래세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대 목표로 하자는 데 노사정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스몰딜’ 수준이라도 합의를 이끄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계속고용과 관련된 논의에는 타협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권 위원장은 “계속고용 논의는 기본방향에 대한 합의라도 내년 1분기까지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층별 위원회인 청년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권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노총과 논의할 것”이며, “관련 실무회의를 바로 시작해 11월까지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sc**

담당 기획과 류형민 사무관



▲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회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일 노동법제 비교」 발간 기념 세미나 개최



▲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일 노동법제 비교' 세미나에서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오른쪽에서 일곱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24년 8월 24일 「한·일 노동법제 비교」 책자를 발간하고, 9월 6일에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일본은 연공임금 체계, 이중 노동시장, 기업별 노조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다양한 개도 개선을 추진하여,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정책과 제도를 비교하는 주요 대상국이었다. 그럼에도 최근 일본의 제도 변화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여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사노위에서는 양국의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정년 등 개별근로관계와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 집단노사관계, 산업안전, 고용보험, 고용·노동 행정 등의 법령과 제도를 비교하는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

9월 6일에는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일본 노동법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일 노동법제 비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덕호 상임위원을 좌장으로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수경 강원대 비교법연구소 연구교수가 각각 최근 일본 노동시간 제도 변화와 일본 고령자 고용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이나경 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와 차동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김희성 교수는 아베 정부 이후 경제성장의 구조적인 문제인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

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노동시간 제도를 소개하였다.

일본은 '일하는 방식 개혁'의 우선 과제로 노동기준법 제36조를 개정하여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의 한도 시간을 원칙적으로 월 45시간, 연 360 시간으로 제한하였다. 특례로서 임시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정으로 한도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간 72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근로자 건강을 위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년 10일 이상의 연차 유급휴가 중 5일은 시기를 지정하여 부여하도록 하였다. 또 전날의 근무 종료 시각과 다음 날의 근무 시작 시각 사이에 휴식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근무 간 인터벌 제도'를 보급·촉진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유연한 근무방식을 위해서 일정직무 범위가 명확하고 일정한 연소득 요건을 충족한 고도의 전문직



▲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 9월 6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한·일 노동법제 비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법적 근로시간 적용을 제외시키는 '고도(高度) 프로페셔널(professional) 제도'와 업무수행 수단과 시간 배분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겨 근로자가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근로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박수경 연구교수는 일본의 고령자 장년 연장제도에 대해 소개하였다. 일본은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정년인상 등에 따른 고령자고용확보조치 도입을 법적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65세까지 고용 확보 조치를 위해 사업주는 ▲65세까지 정년 연장, ▲정년제 폐지, ▲65세까지 계속고용제도(재고용제도, 근무연장제도) 중 한 가지를 조치하도록 하였다. 같은 법을 개정하여 2021년 4월 1일부터는 70세까지 취업기회 확보(노력의무)를 도입하여 ▲70세까지 정년 연장, ▲정년제 폐지, ▲70세까지 계속고용제도 도입 ▲고령자 희망 시 70세까지 계속적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제도 도입, ▲고령자가 희망하는 때에는 70세까지 사업주가 자신이 실시하는 사회공헌사업이나 사업주가 위탁, 출자(자금 제공) 등을 하는 단체가 행하는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할 수 있

도록 하는 조치 중 하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운영을 위해 노사가 합의해서 현장의 실정에 맞게 규범을 설정할 수 있다. 과반수대표제, 노사위원회와 같은 사업장 내 노사 간 소통과 협력이 효율적인 제도 운영 과제이고, 정년 연장 관련해서는 정년 이후의 임금 수준과 연금 등의 제도를 어떻게 연계하여 설정할지가 중요한 정책적 고민 지점이었다.

한 국가의 법과 제도를 단순하게 비교해서는 이해의 한계가 있다. 법과 제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갈등과 제도가 도입되고 운영되는 경제사회적 맥락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해 비슷한 정책적 고민을 안고 있다. 우리에게도 미래 세대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권리와 자유에 기반한 조율된 유연·안정성'을 어떻게 현장에 맞게 실현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slc**

담당 전문위원실 강금봉 전문위원

위원회 유튜브 '더 생생한 소식을 원하시면' 유튜브 검색창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검색하세요.

경사노위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보세요!

위원회 최신 소식과 노동현안 토론 등 다양한 정보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찍고 지금 바로 구독해 보세요!